

이석구 기무사령관 직대 “미공개 5월 자료 국방부 특조위에 남김없이 제출”

전두환 행적·발포명령 드러날지 관심 집중

존안자료 48권 중 민감 이유 제외됐던 1~9권 포함될 듯
5월단체들 “진상규명 계기” 환영 속 신뢰도 의문 제기도

이석구(육사 41기) 국군기무사령관 직 무대리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5·18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1980년 5월 당시 보안사령관(기무사 전신)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기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기무사 존안자료(48권) 중 1~9권에 5·18 당시 상황 자체가 가깝지 않거나 기록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료 공개에 대해 광주 5월 단체들도 5·18 진상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제출 자료 조작 등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직무대리는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참여정부 하에 총 66건으로 엄청난 자료를 다 제출했다”면서도 “제가 가서 보니 대부분 제출했고 추가적 식별자료가 있더라. 당시 민감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번에 (특조위에) 다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자료가 나오고 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 단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두 48권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기무사 존안자료 중 1~9권은 그동안 진행됐던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도 기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

다.

존안자료는 문서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기록자가 직접 보고 들었던 상황 자체를 가감 없이 기록한 자료 등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존안자료가 공개되면 소문으로만 돌았던 5·18 이전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이나 어떤 식으로 발포 명령이 내려졌는지 문서상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지역 군사 전문가들은 “역사 속 사관(史官)처럼 존안자료 작성자는 누가 될 것이고 어떤 말을 했는지 상황 자체를 보고 소상히 기록한다”며 “특히 당시 국내 모든 정보를 취합했던 기무사 자료라면 5·18 때 모든 군부대 작전·지휘·명령 체계가 나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30여년 간 국회·정부기록물보관소·육군본부·검찰·기무사 등에서 5·18 자료를 수집·연구한 정수만 전 전 5·18민주공화주유족회장은 “1997년 국방부 과

거사진상규명위원회 회의 때 참석해 당시 보안대 참모장에게 존안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빼고 제출한 적이 있다”며 “군부대는 모든 상황을 일지에 기록하기 때문에 보안사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당연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정 전 회장은 “그동안 5·18 관련 군부대 자료가 위조나 폐기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며 기무사 자료도 사후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정작 중요한 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임명된 이 직무대리는 현재 소장 계급으로, 다음 인사 때 중장으로 진급해 정식으로 기무사령관에 취임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연합뉴스

백마산 승마장 부당 허가 공무원 징계 적법

광주지법 행정2부 판결

광주 백마산 승마장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부당하게 건축허가 내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 A(시설 6급) 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갑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서구청 도시계획 담당으로 있으면서 백마산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2015년 승마장 건축으로 백마산 훼손 논란이 일었고, 광주시는 감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축허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시 감사 결과에서 도시계획심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주민의

견 청구, 토지형질변경 면적 허가 등의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구청은 시 감사 결과를 근거로 A씨에게 갑분 1개월 처분했다.

A씨는 “관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한 잘못일 뿐 고의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관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고, 그 결과 피고가 주민들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으며, 건축허가와 관련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징계 규칙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면 갑분 또는 견책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이 기준 내에서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보이스피싱 수배 중 범행 중국인 검거

보이스피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10대 중국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중국국적의 이모(18)군은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군은 지난 14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 남부경찰서 A(여·65)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800만원을 훔쳐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은행 계좌가 범좌에 이용되고 있다”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세탁기 안에 보관하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지난 7일에도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500여만원을 훔쳐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A씨가 공범과 통화하며 집을 비운 틈을 타 A씨의 아파트에 침입했지만 외출했다 귀가한 A씨의 아들과 마주치는 바람에 도주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분원 신축 비리 의혹 전남도 보건환경연 압수수색

전남경찰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원의 분원 신축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분원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사전 결탁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입찰 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

도박비 마련하려... 일했던 회사서 고가 자전거 상습 절도

○...도박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일했던 회사의 창고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온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모(30)씨는 지난 6월10일 밤 10시께 광주 서구 장록동 한 자전거 불류창고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시가 19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자전거 10대(1900만원 상당)를 자신이 렌트한 차량에 싣고 갔다는 것.

○...인터넷 도박 중독자로 알려진 최씨는 자전거 회사의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회사 납품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전거와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훔친 자전거를 대리점과 인터넷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달미.

/김한영기자 young@



수상 인명구조 훈련 17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수상안전 인명구조요원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인명구조 훈련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음주운전 검사 10년간 20명 모두 경징계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검사들이 징계 기준상 중징계가 가능한데도 모두 경징계 이하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명으로, 정식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갑분은 5명, 견책은 2명이었고, 12명은 그보다 수위가 더 낮은 인사 조치인 경고(11명)나 주의(1명) 처분에 그쳤다. 징계가 이뤄지기 전 스스로 검사를 떠난 의원면직자도 1명 있었다.

일종의 징계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음주 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갑분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갑분 또는 정식 처분을 하게 된다.

검찰의 징계기준이 경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단순 음주 운전으로 단 1회만 적발돼도 정식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대학생 열차에 치여 숨져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1시55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철길에서 대학생 김모(21)씨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날 오후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의 부검, 유족과 기관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

각종 모임·행사·세미나는 지리산 온천지구 K호텔 에서!



★ K호텔의 5대 특징 ★

- ▶ 깨끗하고 저렴한 객실요금
- ▶ 넓고 쾌적한 대형 세미나실
- ▶ 전망좋은 바베큐 시설
- ▶ 무료로 사용 가능한 노래방 시설
- ▶ 직접 조리해서 먹을수 있는 식당
- ▶ 문의. 010-3605-5000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